

3분기 한반도 평화지수, 남북 관계 긴장 상태 지속

-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새로운 돌파구 모색 시급

2011. 11.

목 차

■ 3분기 한반도 평화지수, 남북 관계 긴장 상태 지속 -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새로운 돌파구 모색 시급	
I. 3분기 HRI 한반도 평화지수 조사 결과	1
II. 남북 관계 현안 설문 조사 결과	6
< 부록 1 > HRI 한반도 평화지수 개요	16
< 부록 2 > 교류지수 주요 변수	17
< 부록 3 > 남북 관계 전문가 설문 조사	18

Executive Summary

□ 3분기 한반도 평화지수, 남북 관계 긴장 상태 지속

-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새로운 돌파구 모색 시급

○ 2011년 3분기 HRI 한반도 평화지수 조사 결과

(종합 평가) 3분기 HRI 한반도 평화지수와 4분기 기대지수는 전 분기에 비해 약 3~4p 소폭 상승하였다. 이는 남북 및 북미 비핵화회담 개최, 종교계와 사회문화단체들의 방북, 통일부 인사 개편, 남북러 가스관 사업에 대한 기대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반도 평화지수는 천안함 침몰 이후 여전히 '긴장 고조'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4분기 기대지수 역시 '긴장 고조' 상태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이는 UEP 문제로 6자 회담 재개 전망이 불투명한 가운데, 남북관계도 천안함·연평도 사태로 인해 가시적인 성과 도출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주요 특징) 2011년 3분기 한반도 평화지수를 조사한 결과 3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주관적·객관적 지수가 모두 상승했으며, 다음 분기에 대한 기대지수도 소폭 상승하였다. 객관적 실적 자료에 기초한 정량분석지수는 36.1에서 38.0로 1.9p 상승하였으며, 전문가들의 인식과 주관적 판단에 근거한 전문가평가지수도 지난 분기 18.2에서 25.3으로 7.1p 상승하였다. 또한, 2011년 4분기 기대지수도 다소 회복되었으나 2011년 2분기 44.6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항목별로는 전문가평가지수는 '전시 및 준전시' 상태에서 벗어나 '긴장 고조' 상태로 겨우 회복했으며, 정량분석지수는 여전히 '긴장 고조'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량분석지수 중 이벤트지수는 발리 남북비핵화회담을 계기로 상승하였으나, 북한의 정상회담 사전 접촉 폭로와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 제정, 금강산 체류 인원 철수 조치 등으로 상승 폭은 45.2에서 47.5로 2.3p로 제한적이었다. 교류지수 역시 종교계 방북과 민간의 대북 인도적 지원 등으로 26.9에서 28.5로 1.6p 상승에 그쳤다.

셋째, 성향별 평가에 있어서는 성향 구분없이 모든 전문가들이 지난 분기보다 남북 관계가 개선된 것으로 평가하였으며, 특히 진보 성향의 평가가 가장 많이 상승하였다. 한편, 4분기 기대지수에 대해서는 중도 성향의 큰 폭 상승에도 불구하고, 보수·진보 성향의 전문가 지수는 소폭 하락함으로써, 성향에 따라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 남북 관계 현안 설문조사

(개관) 남북 경색 장기화로 피로감이 누적되어 새로운 돌파구 마련에 한 목소리

전문가와 일반인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이들 모두 현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 상당수가 불만을 갖고 있으며, 지난 정부에 비해 '잘 못한다'는 응답 비율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정부의 대북 강경 원칙에 따른 남북 경색의 장기화에 피로감을 느끼면서, 한결 같이 남북 관계 개선의 돌파구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하였다. 돌파구 해법으로는 이산가족 상봉의 정례화와 남북정상회담 추진, 대북 인도적 지원 확대와 금강산·개성 관광 재개, 남북정상회담 추진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2012년도 남북 관계 전망에 대해서는 현재와 비슷한 수준에 머물 것이란 응답에 일반인은 상당수(64.2%)를 차지하였고, 전문가들도 43.8%나 차지했다.

한편, 정부의 대국민 통일 의식 제고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통일비용 부담 의향은 오히려 2010년과 2011년 2년 연속 감소하였으며, 일반인들은 전문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통일(자유로운 왕래)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남북 관계 개선 과제) 이산가족 상봉의 정례화와 남북정상회담 추진 시급

남북 관계 현황과 관련하여 전체 80명의 전문가 중 85.0%, 1,007명의 일반인 중 79.7%인 절대 다수가 남북 경색 국면의 장기화에 대해 피로감을 느끼면서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고 진단하였다. 향후 남북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으로 '이산가족 상봉의 정례화'에 대한 찬성 응답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도적 지원 확대와 남북 정상회담 추진, 그리고 개성공단 사업 활성화와 금강산 관광 재개, 남북러 가스관 연결 사업에 대해서도 전문가와 일반인 모두 2/3 이상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는 전문가들은 인도적 지원 확대(21.3%)와 남북정상회담 추진(20.0%), 금강산·개성 관광 재개(20.0%)를, 일반인들의 경우에는 남북정상회담 추진(33.5%)과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30.4%)를 지적하였다.

(북핵 문제) 북한의 핵 포기 가능성은 낮지만, 우리 정부의 적극적 역할 중요

북한의 핵 포기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문가들(62.5%)과 일반인들(81.0%) 모두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하였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6자회담 당사국들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였으며, 이와 함께 전문가들은 미국(22.8%), 중국(19.0%), 한국(12.6%) 순으로 미국의 역할을 강조한 반면, 일반인들은 한국(26.0%), 중국(25.6%), 미국(9.7%) 순으로 우리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였다.

(대북 정책 평가와 남북 관계 전망) 대북 정책 불만 속에 2012년 남북 관계 전망은 불투명
현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 전문가의 73.8%, 일반인의 66.9%가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전문가들(68.4%)과 일반인들(49.0%) 모두 과거 정부보다 '잘 못한다'고 응답하였다. 2012년 남북 관계 전망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현재보다 좋아질 것이라고 응답(55.0%)한 반면, 일반인들은 현재와 비슷한 수준에 머물 것이라고 응답(64.2%)한 비중이 높았다. 차기 정부의 중점 추진 과제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정경 분리 원칙에 근거한 남북경협 확대'(29.4%)를 지적한 반면, 일반인들은 '남북정상회담의 정례화'(16.9%)와 '사회문화 교류와 대북 인도적 지원 확대'(16.9%)를 지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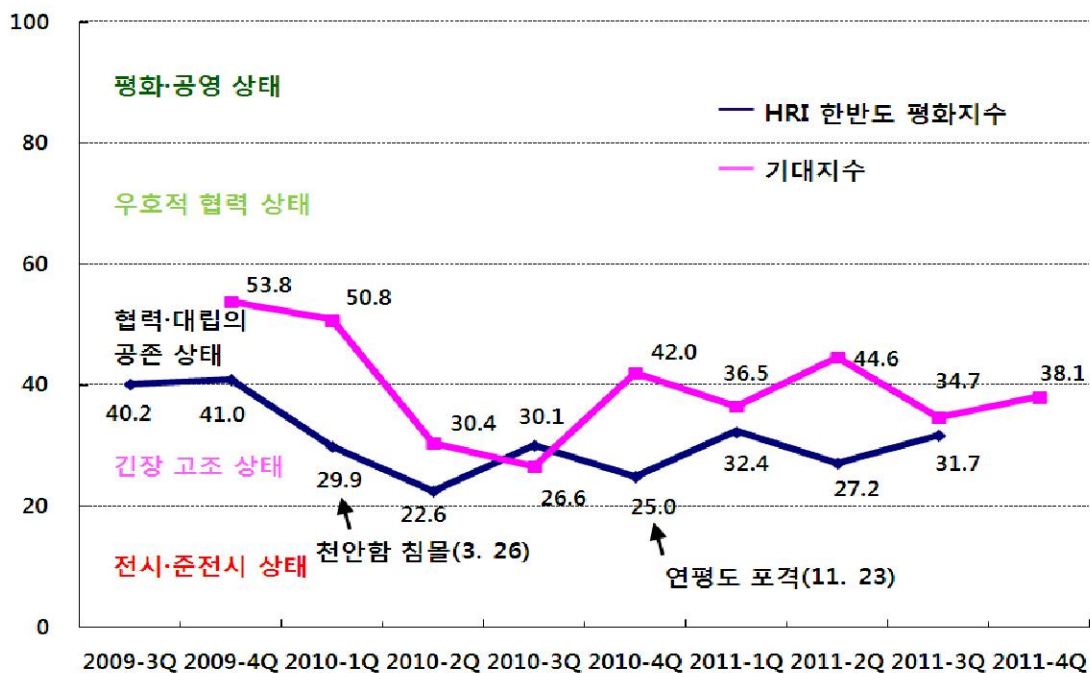
(통일 의식) 일반국민들의 통일 의식과 통일비용 부담 의향이 약화

통일 의식과 통일비용 부담 등에 대해 일반인들은 전문가에 비해 소극적·부정적 의견을 보였다. 우선, 통일의 수준에 대해 전문가들은 '1국가 2체제의 평화 공존'(43.0%) 상태를, 일반인들은 '자유로운 왕래'(44.4%) 수준의 통일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 시기에 대해서는 양측 모두 11년 이상 소요될 것이라는 의견이 다수(60% 이상)를 차지했으며, '통일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일반인(19.8%)이 전문가(1.3%)에 비해 비관적이다. 통일비용 부담 의향에 대해서는 일반인들은 연 10만원 이하를 부담하겠다는 의견이 96.9%로 비용 부담에 대한 거부감이 컸으나, 전문가들은 연 11만원 이상을 부담하겠다는 응답이 43.1%나 차지하였다. 통일편익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은 96.3%가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반면, 일반인들은 28.4%가 손해가 된다고 응답하였다. 다만, 통일세 신설에 대해 전문가들(55.0%)과 일반인들(54.3%)의 과반수가 찬성 의견을 보여 일반인들은 통일세 자체에는 찬성하지만 본인의 실제적 부담은 꺼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1. 2011-3분기 HRI 한반도 평화지수 조사 결과

- (종합 평가) 3분기 한반도 평화지수와 4분기 기대지수는 남북 및 북미 비핵화 회담 개최와 종교계와 사회문화단체들의 망북, 통일부 인사 개편, 남북 리 가스관 사업에 대한 기대 등으로 전 분기에 비해 약 3~4p 소폭 상승
- 3분기 HRI 한반도 평화지수는 31.7을 기록하여 다소 회복했으나, 여전히 '긴장 고조' 상태가 지속
 - 2분기 27.2를 기록했던 한반도 평화지수는 전기 대비 4.5p 상승한 31.7을 나타냄으로써 한반도의 긴장이 다소 진정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
- 기대지수도 전기 대비 3.4p 소폭 상승하면서 전문가들의 2011년 4분기 남북 관계에 대한 기대도 다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2011년 4분기 기대지수는 38.1로 나타나 4분기에도 여전히 '긴장 고조 상태'에 머물 것으로 예상됨

< 2009~2011 HRI 한반도 평화지수의 추이 >



○ (특정 분석) 주관적·객관적 지수가 모두 상승했으며, 다음 분기에 대한 기대지수도 소폭 상승

- 3분기 전문가평가지수는 25.3, 정량분석지수는 38.0을 기록함으로써 지난 분기보다 모두 상승
 - 지난 분기에는 모든 부문의 지수가 하락하였으나, 이번 분기에는 모든 부문의 지수가 상승했으며, 특히 전문가평가지수가 7.1p 상승
- 전문가들의 기대지수는 다소 회복되었으나 상승폭이 그다지 높지는 않음
 - 이는 UEP 문제로 6자회담 재개 전망이 불투명한 가운데, 남북관계도 천안함·연평도 사태로 인해 가시적인 성과 도출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임
- 주관적 평가와 객관적 평가간 격차는 여전하여, 전문가들이 현 상황을 실제보다 심각하게 인식하는 것은 여전
 - 주관적 평가인 전문가평가지수와 객관적 평가인 실적치로 보는 정량분석지수 사이의 격차(| 전문가평가지수 - 정량분석지수 |)는 12.7로, 지난 분기보다는 격차가 다소 완화

< 2009~2011 HRI 한반도 평화지수 조사 결과 >

구분	HRI 한반도 평화지수					기대지수
		전문가 평가지수	정량분석지수	이벤트지수	교류지수	
'11-3분기	31.7 (▲4.5)	25.3 (▲7.1)	38.0 (▲1.9)	47.5 (▲2.3)	28.5 (▲1.6)	38.1 (▲3.4)
'11-2분기	27.2 (▽5.2)	18.2 (▽5.2)	36.1 (▽5.2)	45.2 (▽2.8)	26.9 (▽7.7)	34.7 (▽9.9)
'11-1분기	32.4 (▲7.4)	23.4 (▲8.0)	41.3 (▲6.8)	48.0 (▲15.2)	34.6 (▽1.6)	44.6 (▲8.1)
'10-4분기	25.0 (▽5.1)	15.4 (▽15.0)	34.5 (▲4.7)	32.8 (▽2.1)	36.2 (▲11.6)	36.5 (▽5.5)
'10-3분기	30.1 (▲7.5)	30.4 (▲19.5)	29.8 (▽4.6)	34.9 (▲1.6)	24.6 (▽10.8)	42.0 (▲15.4)
'10-2분기	22.6 (▽7.3)	10.9 (▽5.6)	34.4 (▽8.9)	33.3 (▽9.5)	35.4 (▽8.4)	26.6 (▽3.8)
'10-1분기	29.9 (▽11.1)	16.5 (▽17.0)	43.3 (▽5.2)	42.8 (▽6.5)	43.8 (▽3.9)	30.4 (▽20.4)
'09-4분기	41.0 (▲0.8)	33.5 (▽7.0)	48.5 (▲8.7)	49.3 (▲1.2)	47.7 (▲16.2)	50.8 (▽3.0)
'09-3분기	40.2	40.5	39.8	48.1	31.5	5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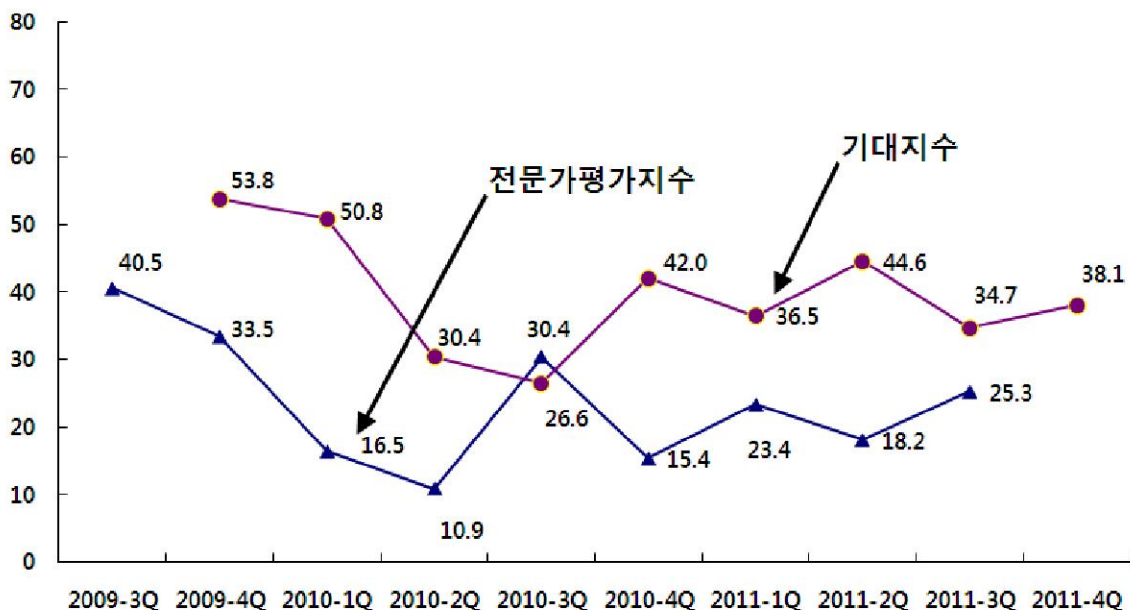
주 : ()내는 지난 분기 대비 증감을 표시(p)

○ (항목별 평가) 전문가평가지수는 '전시 및 준전시' 상태에서 벗어나 '긴장 고조' 상태로 겨우 회복했으며, 정량분석지수는 여전히 '긴장 고조' 상태를 지속

(1) 전문가평가지수 (2011년 2분기 : 18.2 → 2011년 3분기 : 25.3)

- 총 80명의 전문가를 설문조사한 결과, 이들의 남북 관계에 대한 평가는 지난 분기의 '전시 및 준전시' 상태에서 '긴장 고조' 상태로 회복
- 3분기 전문가평가지수는 전기 대비 7.1p 상승한 25.3을 기록하면서, 연평도 도발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
- 이는 중단되었던 남북 당국간 대화가 발리 비핵화회담을 계기로 재개되었으며, 종교계와 사회문화단체들의 방북, 민간의 대북 지원 재개 등으로 남북 관계가 다소 개선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
- 기대지수는 전기 대비 3.4p 상승한 38.1을 기록함으로써, 전문가들의 2011년 4분기의 남북 관계 개선 기대감이 지난 분기에 다소 상승
- 이는 6자회담 재개를 위한 남북 및 북미 접촉과 남북러 가스관 사업 추진을 위한 당국간 접촉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

< 2009~2011 전문가평가지수와 기대지수의 추이 >



(2) 정량분석지수 (2011년 2분기 : 36.1 → 2011년 3분기 : 38.0)

- 3분기 정량분석지수는 지난 분기의 36.1보다 1.9p 상승한 38.0을 기록함으로써, 남북 관계의 객관적 실적은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 정량분석지수 상승은 정치·군사 부문의 '이벤트 지수'와 경제·사회·인도적 지원 부문의 '교류 지수'가 소폭 상승한 것에 기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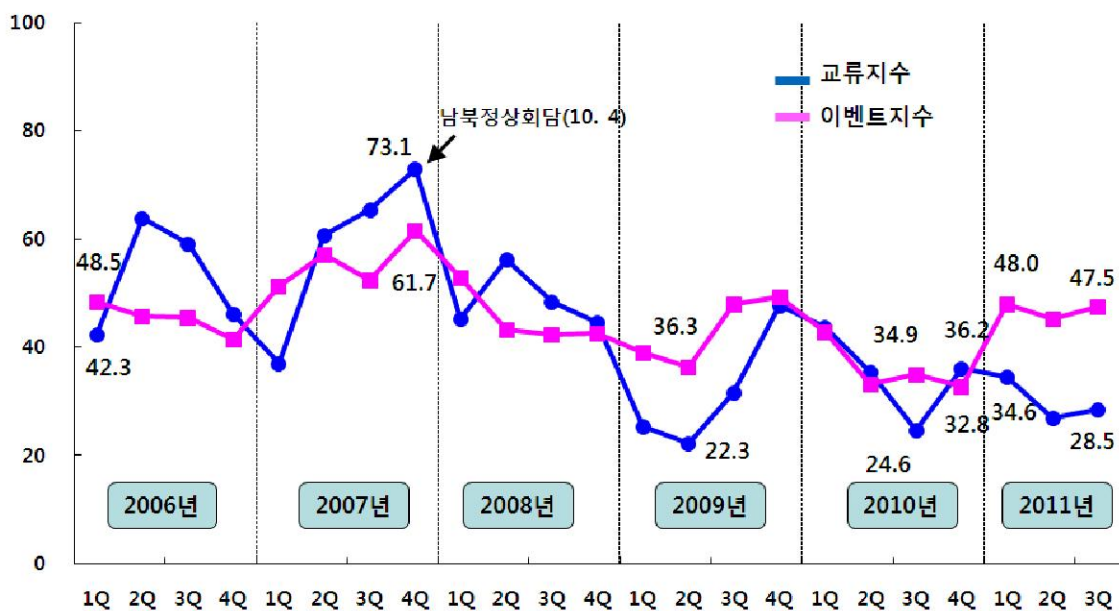
① 이벤트지수 (2011년 2분기 : 45.2 → 2011년 3분기 : 47.5)

- 이벤트지수는 남북비핵화회담과 북미고위급회담을 계기로 2.3p 상승하였음
- 그러나 북한의 정상회담 사전 접촉 폭로와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 제정 및 금강산 체류 인원 철수 조치 등으로 상승 폭이 별로 높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② 교류지수 (2011년 2분기 : 26.9 → 2011년 3분기 : 28.5)

- 교류지수는 전기 대비 1.6p 소폭 상승한 28.5를 기록
- 이는 북한 수해 복구를 위한 민간의 인도적 지원이 소폭 상승하였기 때문
- 또한, 3분기 남북교역액은 전분기 대비 1.6% 상승

< 2006~2011 이벤트지수와 교류지수의 시계열 추이 >



주 : 이벤트지수는 정치·군사 분야의 변화를, 교류지수는 경제·사회·인도지원 분야의 변화를 표시

○ (성향별 분석) 성향 구분없이 모든 전문가들은 지난 분기보다 남북관계가 개선된 것으로 평가하였으며, 특히 진보 성향의 전문가 평가가 가장 많이 상승

- 성향별 전문가평가지수는 보수, 중도, 진보 성향이 각각 27.2, 24.5, 24.3으로 지난 분기에 비해 각각 5.6p, 5.1p, 8.3p 상승하여 긍정적 평가로 반전
 - 진보 성향의 전문가 평가가 큰 폭 상승한 것은 대북 수해 피해에 대한 정부의 인도적 지원 재개 제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
 - 한편, 모든 전문가들이 개선된 평가를 제시함으로써, 연평도 도발 이후 최악의 상황은 탈피한 것으로 인식
- 4분기 전망에 대한 기대지수는 현재 평가지수보다 여전히 높게 나타났으나, 성향에 따라 전망이 엇갈림
 - 기대지수는 중도 성향의 전문가들은 대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한 반면, 보수 성향과 진보 성향의 전문가들은 전분기보다 하락함으로써 4분기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은 높지 않음
 - 이는 6자회담 재개를 위한 남북간 대화와 남북러 가스관 사업 추진을 위한 대화의 장이 마련될 것이라는 기대감은 있으나, 이러한 대화가 실제 가시적 성과로 이어질 지에 대해서는 불안감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

< 성향별 전문가평가지수 >

구 분	보수 성향		중도 성향		진보 성향		전문가 평가지수	기대지수	HRI 평화지수
	현재	예상	현재	예상	현재	예상			
'11. 3분기	27.2 (▲5.6)	39.3 (▽0.1)	24.5 (▲5.1)	39.0 (▲10.7)	24.3 (▲8.3)	36.0 (▽0.6)	25.3 (▲7.1)	38.1 (▲3.4)	31.7 (▲4.5)
'11. 2분기	21.6 (▽0.4)	39.4 (▽3.6)	19.4 (▽7.1)	28.3 (▽25.0)	16.0 (▽3.0)	36.6 (▽2.3)	18.2 (▽5.2)	34.7 (▽9.9)	27.2 (▽5.2)
'11. 1분기	22.0 (▲7.0)	43.0 (▽2.4)	26.5 (▲0.8)	53.3 (▲2.3)	19.0 (▲10.1)	38.9 (▲10.2)	23.4 (▲8.0)	44.6 (▲8.1)	32.4 (▲7.4)
'10 4분기	15.0 (▽18.6)	45.4 (▽1.3)	25.7 (▽4.6)	51.0 (▲10.2)	8.9 (▽20.5)	28.7 (▽10.0)	15.4 (▽15.0)	36.5 (▽5.5)	25.0 (▽5.1)
'10 3분기	33.6 (▲20.6)	46.7 (▲15.7)	30.3 (▲20.8)	40.8 (▲18.4)	29.4 (▲18.6)	38.7 (▲9.3)	30.4 (▲19.5)	42.0 (▲15.4)	30.1 (▲7.5)
'10 2분기	13.0 (▽6.0)	31.0 (▽0.3)	9.5 (▽4.5)	22.4 (▽8.2)	10.8 (▽5.0)	29.4 (▲0.6)	10.9 (▽5.6)	26.6 (▽3.8)	22.6 (▽7.3)
'10. 1분기	19.0 (▽20.7)	31.3 (▽20.1)	15.0 (▽15.5)	30.6 (▽24.0)	15.8 (▽13.9)	28.8 (▽20.0)	16.5 (▽17.0)	30.4 (▽20.4)	29.9 (▽11.1)
'09. 4분기	39.7 (▽10.5)	51.4 (▽6.2)	30.5 (▽7.6)	54.6 (▲0.2)	29.7 (▽8.1)	46.8 (▽4.9)	33.5 (▽7.0)	50.8 (▽3.0)	41.0 (▲0.8)
'09. 3분기	50.2	57.6	38.1	54.4	37.8	51.7	40.5	53.8	40.2

2. 남북 관계 현안 설문조사 결과

○ (남북경색 국면에 대한 의견) 일반인과 전문가들 모두 현재의 남북관계 경색 국면에 대해 변화가 필요하다고 응답

- 전체 80명의 전문가 중 약 85.0%, 1,007명의 일반인 중 79.7%인 절대 다수가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 이후 남북 경색 국면의 장기화에 대해 피로감을 느끼면서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하다고 응답

남북 경색 국면 장기화	전문가	일반인
변화가 필요하다	85.0%	79.7%
현 상태도 괜찮다	15.0%	20.3%

○ (남북 관계 개선 노력) 향후 남북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으로 '이산가족 상봉의 정례화'에 대한 찬성 응답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이산가족 상봉의 정례화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98.8%, 일반인의 94.3%가 찬성하여, 응답자의 대부분이 찬성 의견을 표명
 - 남북정상회담 추진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82.3%, 일반인의 84.7%가 찬성하는 것으로 응답
 - 또한 중단된 남북교역 재개와 개성공단 사업 활성화, 금강산·개성 관광 재개, 남북러 가스관 연결 사업 추진에 대해서도 전문가와 일반인 모두 2/3 이상 찬성 의견을 표시
- 일반인들의 경우 의약품, 분유 등 인도적 지원 확대에는 상당수가 찬성하였으나, 대북 쌀 지원에 대해서는 찬성(51.1%)이 절반에 불과하여 전문가(77.2%)에 비해 다소 부정적 의견을 보임
 - 그러나 의약품, 분유 등 인도적 지원 확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96.3%로 응답자의 거의 전부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반인들도 76.2%의 높은 비율로 찬성 의견을 표명

- 남북경협 사업의 재개 및 활성화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일반인 모두 찬성 의견이 훨씬 더 높게 나타남
 - 금강산과 개성관광의 재개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79.7%, 일반인의 67.1%가 찬성하는 것으로 응답하여 전문가들의 찬성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중단된 남북교역의 재개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93.6%가 찬성하여 응답자의 대부분이 찬성하였으며, 일반인들의 경우에도 77.2%로 찬성 의견이 많았음
 - 개성공단 2단계 사업 활성화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83.5%, 일반인의 72.7%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남

- 남북러 가스관 연결 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80.0%, 일반인의 68.2%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남
 - 연평도 등 서해 공동어로구역 설정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65.8%, 일반인의 59.4%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남

향후 남북 관계 개선 노력		전문가	일반인
이산가족 상봉의 정례화	찬성	98.8%	94.3%
	반대	1.3%	5.7%
남북정상회담 추진	찬성	82.3%	84.7%
	반대	17.7%	15.3%
중단된 남북교역(일반교역) 재개	찬성	93.6%	77.2%
	반대	6.4%	22.8%
의약품, 분유 등 인도적 지원 확대	찬성	96.3%	76.2%
	반대	3.8%	23.8%
개성공단 사업 활성화(2단계)	찬성	83.5%	72.7%
	반대	16.5%	27.3%
남북러 가스관 연결 사업 추진	찬성	80.0%	68.2%
	반대	20.0%	31.8%
금강산·개성 관광 재개	찬성	79.7%	67.1%
	반대	20.3%	32.9%
연평도 등 서해 공동어로구역 설정	찬성	65.8%	59.4%
	반대	34.2%	40.6%
대북 쌀 지원	찬성	77.2%	51.1%
	반대	22.8%	48.9%

주 : 일반인들의 높은 응답률 순으로 정리

○ (우선 추진 과제)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 전문가들은 ‘의약품, 분유 등 인도적 지원 확대’를 우선 추진 과제로 지적하였으나, 일반인들은 ‘남북정상회담 추진’을 제시

- 전문가들은 의약품, 분유 등 인도적 지원 확대(21.3%), 남북정상회담 추진 및 금강산·개성관광 재개(20.0%) 등을 우선 추진 과제로 선정
- 반면, 일반인들은 남북정상회담 추진(33.5%)과 이산가족 상봉의 정례화(30.4%)를 우선 추진 과제로 선정

우선 추진 과제	전문가	일반인
남북정상회담 추진	20.0%	33.5%
이산가족 상봉의 정례화	10.0%	30.4%
의약품, 분유 등 인도적 지원 확대	21.3%	11.4%
금강산·개성 관광 재개	20.0%	3.4%
대북 쌀 지원	10.0%	5.2%
중단된 남북교역(일반교역) 재개	10.0%	5.1%
남북러 가스관 연결 사업 추진	5.0%	4.1%
개성공단 사업 활성화(2단계)	3.7%	3.8%
연평도 등 서해 공동어로구역 설정	0%	3.1%

○ (북한의 핵 포기 여부) 전문가들과 일반인들 모두 북한의 핵 포기 가능성에 부정적 의견을 나타냈으며, 6자회담 당사국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

- 전문가들의 62.5%, 일반인들의 81.0%가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하였으나, 북미수교 등 북한 체제 안전이 보장되면 포기할 것이라는 의견은 전문가 35.0%, 일반인 12.0%로 나타남

북한의 핵 포기 여부	전문가	일반인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62.5%	81.0%
6자회담을 통해 논의가 진전되면 포기할 것이다	2.5%	7.0%
북미수교 등 북한 체제의 안전이 보장되면 포기할 것이다	35.0%	12.0%

-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6자 당사국들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전문가 45.6%, 일반인 38.7%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전문가들은 공동 노력 외에, 미국(22.8%), 중국(19.0%), 한국(12.6%)순으로 미국의 역할을 강조한 반면, 일반인들은 한국(26.0%), 중국(25.6%), 미국(9.7%)순으로 우리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

북핵 해결을 위한 접근	전문가	일반인
6자 당사국들의 공동 노력	45.6%	38.7%
한국의 공조 추진	12.6%	26.0%
중국의 적극적 중재	19.0%	25.6%
미국의 대화 노력	22.8%	9.7%

- 전문가들은 성향에 구분없이 한미 양국이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전제 조건 중 일부만 충족하더라도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며 '유연성'을 강조(72.5%)
- 한미 양측이 제시한 6자회담 전제조건은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 중단, 국제원자력기구 사찰단 복귀, 대량살상무기 실험 모라토리엄 선언 등으로, 특히 UEP 문제 진전이 관건임

6자회담 재개의 전제 조건	전문가	보수	중도	진보
6자회담의 전제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함	10.0%	9.1%	15.6%	3.8%
전제조건 가운데 일부만 충족되어도 대화를 시작해야 함	72.5%	86.4%	68.8%	65.4%
전제조건 없이 무조건 6자회담 재개해야 함	17.5%	4.5%	15.6%	30.8%

- 또한, 전문가들은 북핵 문제에 대한 접근 수준은 '모든 핵 프로그램의 완전한 불능화 추구'(53.2%)가 목적이 되어야 한다고 응답
 - 보수 성향의 전문가들은 완전한 불능화 추구(68.2%)를 목적으로 해야 한다는 응답이 많았던 반면, 진보 성향의 전문가들은 비확산에 주력(65.4%)해야 한다는 응답이 더 많았음

북핵 문제 접근 수준	전문가	보수	중도	진보
모든 핵 프로그램의 비확산에 주력	46.8%	31.8%	41.9%	65.4%
모든 핵 프로그램의 완전한 불능화 추구	53.2%	68.2%	58.1%	34.6%

○ (현 정부 대북 정책 평가)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전문가·일반인 모두 상당수가 만족하지 않고 있으며, 과거 정부에 비해 '잘 못한다'고 평가

- 보수 성향의 전문가들 50.0%, 중도 성향의 전문가들 78.2%, 진보 성향의 전문가들 88.5%는 현 정부의 대북 정책에 불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일반인들의 경우 보수 성향의 51.9%는 대북 정책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남 반면, 중도 성향의 76.1%, 진보 성향의 81.6%는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현 정부 대북 정책	전문가	보수	중도	진보	일반인	보수	중도	진보
매우 만족한다	1.2%	4.5%	0.0%	0.0%	5.0%	9.7%	2.1%	2.1%
만족하는 편이다	25.0%	45.5%	21.9%	11.5%	28.1%	42.2%	21.8%	16.3%
만족하지 않는 편이다	35.0%	31.8%	46.9%	23.1%	45.9%	37.2%	54.6%	47.6%
매우 불만족한다	38.8%	18.2%	31.3%	65.4%	21.0%	10.9%	21.5%	34.0%

- 전문가들은 현재의 남북 관계 경색 상황에 대해 북한의 책임(39.2%)이라는 의견과 남북한 모두의 책임(39.2%)이라는 의견이 동일하게 다수를 차지했으며, 일반인들의 경우 남북한 모두의 책임이라는 응답이 다수를 차지(51.5%)
- 보수 성향의 전문가들(54.5%)과 일반인들(58.9%)은 북한의 책임이 더 크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
- 진보 성향의 전문가들(53.8%)과 일반인들(59.3%)은 남한과 북한의 책임이 반반이라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

현 상황에 대한 책임	전문가	보수	중도	진보	일반인	보수	중도	진보
북한의 책임이 더 크다	39.2%	54.5%	45.1%	19.2%	39.3%	58.9%	29.2%	24.0%
남한의 책임이 더 크다	21.6%	13.7%	22.6%	26.9%	9.2%	2.8%	10.4%	16.7%
남한과 북한의 책임 반반이다	39.2%	31.8%	32.3%	53.8%	51.5%	38.3%	60.4%	59.3%

-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서 전문가들(68.4%)과 일반인들(49.0%) 모두 과거 정부보다 잘 못한다고 응답
 - 보수 성향의 전문가들(47.6%)과 보수 성향의 일반인들(38.4%)은 과거 정부보다 더 잘한다고 응답하였으나, 진보 성향의 전문가들(84.6%)과 진보 성향의 일반인들(71.9%)은 과거 정부보다 잘 못한다고 응답

현 정부 대북정책	전문가	보수	중도	진보	일반인	보수	중도	진보
과거 정부보다 더 잘한다	21.5%	47.6%	15.6%	7.7%	20.8%	38.4%	34.6%	27.0%
과거 정부와 비슷하다	10.1%	14.3%	9.4%	7.7%	30.2%	10.4%	34.4%	55.2%
과거 정부보다 잘 못한다	68.4%	38.1%	75.0%	84.6%	49.0%	8.3%	19.8%	71.9%

○ (2012년 남북 관계 전망) 전문가들은 내년도 남북 관계가 현재보다 좋아질 것이라고 응답(55.0%)한 반면, 일반인들은 현재와 비슷할 것이라고 응답(64.2%)한 비중이 높음

- 전문가들의 경우 보수(63.6%)와 진보(57.7%) 성향의 전문가들 모두 현재보다 좋아질 것이라고 응답하였으나, 중도(50.0%) 성향의 전문가들은 현재와 비슷할 것이라고 응답
- 일반인들은 보수(60.6%)와 중도(66.0%), 진보(67.6%) 성향의 일반인 모두가 현재와 비슷할 것이라고 응답

2012년 남북 관계 전망	전문가	보수	중도	진보	일반인	보수	중도	진보
현재보다 좋아질 것	55.0%	63.6%	46.9%	57.7%	27.8%	32.6%	26.4%	22.6%
현재와 비슷할 것	43.8%	36.4%	50.0%	42.3%	64.2%	60.6%	66.0%	67.6%
현재보다 악화될 것	1.3%	0.0%	3.1%	0.0%	8.0%	6.9%	7.7%	9.8%

○ (차기 정부 중점 추진 과제) 전문가들은 차기 정부의 중점 추진 과제로 '정경 분리 원칙에 근거한 남북경협 확대'를 지적(29.4%), 일반인들은 '남북정상회담의 정례화'와 '사회문화 교류와 대북 인도적 지원 확대'를 지적(각각 16.9%)

차기 정부 중점 추진 과제	전문가	일반인
정경분리로 남북경협 확대	29.4%	12.0%
사회문화교류와 대북 인도적 지원 확대	20.0%	16.9%
남북정상회담의 정례화	15.0%	16.9%
북핵 해결을 위한 국제 공조 강화	13.1%	16.6%
북한의 개혁·개방 유도와 국제금융기구 가입 지원	8.1%	10.3%
남북 평화협정 체결	6.9%	13.0%
북한 인권 개선 노력	6.3%	13.6%
기타	1.2%	0.7%

○ (통일 수준) 전문가들은 '1국가 2체제의 평화공존'(43.0%) 수준의 통일을, 일반인들은 '자유로운 왕래'(44.4%) 수준의 통일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일반인들의 통일 의식은 상대적으로 소극적임

- 일반인들이 전문가에 비해 낮은 수준의 통일은 선호하는 것은 통일에 따른 경제적 부담 등에 기인한 것으로 평가
- 천안함·연평도 사태 이후 전문가들의 통일 의식이 '완전한 통일 국가'에 대한 선호 비중은 낮아지고 '1국가 2체제' 수준의 통일에 대한 선호 비중은 높아졌는데, 이는 남북 경색 장기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보임
- 반면, 일반인들은 꾸준히 '자유로운 왕래' 수준의 통일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항 목	전문가			일반인			
	2009	2010	2011	2008	2009	2010	2011
남북한 완전한 통일	25.0%	34.8%	27.8%	26.9%	22.9%	23.7%	25.1%
1국가 2체제 평화공존	39.8%	31.9%	43.0%	13.5%	17.1%	25.0%	18.8%
자유로운 왕래 수준	29.5%	20.3%	27.8%	50.3%	46.5%	40.6%	44.4%
현 상태도 괜찮다	2.3%	0.0%	1.3%	9.4%	13.5%	10.7%	11.6%

주 : 전문가 조사는 2009년 7월, 2010년 10월, 2011년 10월에, 일반인 조사는 2008년 10월, 2009년 7월, 2010년 11월, 2011년 10월에 각각 시행한 조사 결과임

○ (통일 가능 시기) 전문가들은 통일이 불가능하다는 응답이 거의 전무했으나, 일반인들의 경우에는 약 20% 수준을 차지하여 전문가에 비해 다소 비관적임

- 전문가들과 일반인들 모두 11년은 넘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으나, 통일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훨씬 더 희망적으로 평가

항 목	전문가			일반인			
	2009	2010	2011	2008	2009	2010	2011
5년 이내	0.0%	8.7%	6.3%	3.2%	2.5%	2.4%	2.8%
6~10년	26.1%	27.5%	29.1%	12.9%	14.1%	14.6%	16.4%
11년 넘어야	70.5%	62.3%	63.3%	61.1%	54.7%	61.6%	61.0%
불가능하다	3.4%	1.4%	1.3%	22.8%	28.6%	21.4%	19.8%

○ (통일비용 부담) 일반인들은 전문가보다 통일비용을 부담하고 싶지 않다는 인식이 매우 강한 것으로 나타남

- 일반인들의 경우 통일비용을 연 10만원(월 8,300원) 이하 부담하겠다는 의견이 96.9%로 나타나 비용 부담에 소극적인 태도를 나타냄
 - 특히, 2010년과 2011년에는 통일비용의 '부담 거부'와 '연 1만원 부담'하겠다는 응답이 2009년 46.1%에서 72.1%와 79.4%로 대폭 상승
 - 이는 통일세 제안 이후 통일비용 부담의 실현 가능성을 우려하면서, 통일의 경제적 부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대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 반면 전문가들의 경우 연 11만원 이상 부담하겠다는 응답자가 43.1%를 차지
 - 이는 전문가들의 경우 통일에 대한 인식이 일반인들보다 긍정적이며,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서 절감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

항 목	전문가			일반인			
	2009	2010	2011	2008	2009	2010	2011
부담하고 싶지 않다	4.5%	1.4%	10.1%	30.4%	21.5%	37.4%	46.0%
연 1만원 이하	1.1%	4.3%	13.9%	24.0%	24.6%	34.7%	33.4%
연 2~10만원 이하	29.5%	20.0%	32.9%	35.3%	38.4%	24.6%	17.5%
연 11~20만원 이하	18.2%	28.6%	26.6%	4.3%	5.6%	2.4%	1.6%
연 21~50만원 이하	14.8%	12.9%	10.1%	5.9%	9.9%	0.3%	1.0%
연 51~100만원 이하	31.8%	20.0%	5.1%	—	—	0.3%	0.4%
연 101만원 초과		12.9%	1.3%	—	—	0.2%	0.1%

○ (통일 인식) 통일의 편익에 대해 전문가들은 거의 전부가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일반인은 부정적인 의견도 다수 존재

- 한편, 일반인들의 경우 2010년보다 올해 조사에서 통일 편익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높아져 최근 정부의 대국민 통일 의식 고취 노력이 어느 정도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2010년 53.2% → 2011년 71.6%)

통일 인식	전문가	일반인	
	2011	2010	2011
국익에 도움이 된다	96.3%	53.2%	71.6%
국익에 손해가 된다	3.8%	46.8%	28.4%

- 통일세 신설에 대해서는 전문가들과 일반인들의 과반수가 찬성 의견을 보이고 있음
 - 일반인들의 경우 통일세 신설의 찬성 의견 비율이 지난해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통일에 대한 비용 부담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높아졌음을 보여줌
 - 다만, 통일세 신설 자체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본인의 부담의사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응답함으로써, 인식과 실제 사이에는 다소간의 괴리감이 존재

통일세 신설	전문가	일반인	
	2011	2010	2011
찬성한다	55.0%	43.1%	54.3%
반대한다	45.0%	56.9%	45.7%

이해정 선임연구원(hjlee@hri.co.kr, 02-2072-6222)
 홍순직 수석연구위원(sjhong@hri.co.kr, 02-2072-6221)

< 부록 1 > HRI 한반도 평화지수(HRI Peace Index)의 개요

- 한반도 평화지수란 남북 관계를 중심으로 한반도의 전체적인 평화의 정도를 계량화된 수치로써 나타낸 지수임
- HRI 한반도 평화지수는 주관적 분석 방법론과 객관적 분석 방법론을 종합하여 분석한 통합지수이며, '전문가평가지수'와 '정량분석지수'로 구성
 - 전문가평가지수는 관련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분기별 설문 조사를 통해 산출되며, 다음 분기에 대한 전망치를 바탕으로 '기대지수'도 측정
 - 정량분석지수는 정치·군사 영역의 '이벤트 지수' 사회·문화·인도적 영역의 '교류지수'로 구성됨
- 지수의 범위를 0에서 100으로 설계하였으며 50을 기준으로 0은 남북한의 전시 상태를, 100은 가장 평화로운 상태를 의미함¹⁾

< HRI 한반도 평화지수와 관계 범주 >

관계 범주	내 용	지수 범위
평화·공영 상태	남북 간 신뢰가 구축되고 평화 공존 및 남북 평화체제가 서서히 수립되는 상태	80이상
우호적 협력 상태	남북 간의 교류 협력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상태	60~80미만
협력·대립의 공존 상태	남북 간의 대화와 갈등이 교차되는 상태	40~60미만
긴장 고조 상태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되어 상대방에 대한 실제적인 위협 혹은 갈등이 발생하는 상태	20~40미만
전시·준전시 상태	핵위기가 고조되거나 군사적 충돌이 심화되어 전면전으로 치닫는 상태	20이하

1) 제시된 관계 범주는 산출된 HRI 한반도 평화지수의 크기에 따라 남북 관계 및 한반도의 평화의 정도가 현재 혹은 향후 대체로 어떠한지를 판단하기 위해 만든 참고자료이다. 따라서 HRI 한반도 평화지수를 구성하는 세부지수들을 이 범주에 그대로 적용하여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 부록 2 > 교류지수 주요 변수

< 교류지수 주요 변수 구성 >

구분	중분류	변수
경 제 (6개 변수)	남북 교역	남북한 교역액
		경제 협력액
	협력 사업	협력사업 승인 수
		경제교류협력지원
	관광	금강산 관광객
		개성 관광객
사 회 · 문 화 · 인 도 (8개 변수)	왕래	방남 인원
		방북 인원
	이산가족	이산가족 상봉 수
		이산가족교류지원
	사회문화협력	사회문화협력사업 승인 수
		사회문화협력지원
	인도적 지원	대북지원 (정부)
		대북지원 (민간)

- 주: 1) 남북한 교역액은 일반 교역과 위탁 가공으로 구성
 2) 경제 협력액은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그리고 기타 경제 협력액으로 구성
 3) 경제교류 협력지원은 협력기금의 경제분야 교류협력기반 조성액과 남북교류협력지원 융자액의 합

< 부록 3 > 남북 관계 전문가 설문 조사

1. 조사 개요

- 조사 시기 : 2011년 10월 17일~26일(일반) / 2011년 10월 17일~28일(전문가)
- 조사방법 : 전화조사(일반), 설문지조사(전문가)
- 조사 대상 : 전국의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7명
연구원, 교수 등 북한관련 전문가 80명
-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최대 표본오차는 ±3.08%

2. 조사 내용

□ 남북 관계 분석 및 전망

1. 정치·군사 관계

1-1) 남북 당국자 간 정치적인 신뢰 관계가 좋아졌다

항 목	3분기(%)	2분기(%)
1. 매우 그렇지 않다	7.5	47.1
2. 그렇지 않다	42.5	35.3
3. 보통이다	40.0	16.2
4. 그렇다	10.0	1.4
5. 매우 그렇다	0	0
계	100.0	100.0

1-2) 남북한 간의 군사적인 긴장이 완화되었다

항 목	3분기(%)	2분기(%)
1. 매우 그렇지 않다	8.8	26.5
2. 그렇지 않다	43.8	57.4
3. 보통이다	37.5	13.2
4. 그렇다	10.0	2.9
5. 매우 그렇다	0	0
계	100.0	100.0

1-3) 북한의 대외관계 및 국제사회에서의 입지가 나아지고 있다

항 목	3분기(%)	2분기(%)
1. 매우 그렇지 않다	5.0	19.1
2. 그렇지 않다	37.5	39.7
3. 보통이다	37.5	29.4
4. 그렇다	18.8	11.8
5. 매우 그렇다	1.3	0
계	100.0	100.0

1-4) 북한의 내부 통치 체제가 안정화되고 있다

항 목	3분기(%)	2분기(%)
1. 매우 그렇지 않다	3.8	4.5
2. 그렇지 않다	20.0	27.9
3. 보통이다	43.8	48.5
4. 그렇다	32.5	19.1
5. 매우 그렇다	0	
계	100.0	100.0

1-5) (종합) 전반적으로 남북간 정치·군사적인 관계가 좋아졌다

항 목	3분기(%)	2분기(%)
1. 매우 그렇지 않다	7.5	35.3
2. 그렇지 않다	37.5	48.5
3. 보통이다	46.3	14.7
4. 그렇다	8.8	1.5
5. 매우 그렇다	0	
계	100.0	100.0

1-6) (전망) 남북간 정치·군사적 관계는 현재보다 좋아질 것 같다

항 목	3분기(%)	2분기(%)
1. 매우 그렇지 않다	2.5	11.8
2. 그렇지 않다	21.3	1.4
3. 보통이다	45.0	47.1
4. 그렇다	31.3	27.9
5. 매우 그렇다	0	11.8
계	100.0	100

2. 경제적 관계

2-1) 남북 간의 경제적 교류가 확대되었다

항 목	3분기(%)	2분기(%)
1. 매우 그렇지 않다	6.3	33.8
2. 그렇지 않다	42.5	51.5
3. 보통이다	40.0	13.2
4. 그렇다	11.3	1.5
5. 매우 그렇다	0	0
계	100.0	100.0

2-2) 남북 경제협력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증대되었다

항 목	3분기(%)	2분기(%)
1. 매우 그렇지 않다	1.3	2.9
2. 그렇지 않다	18.8	20.6
3. 보통이다	32.5	39.7
4. 그렇다	41.3	29.4
5. 매우 그렇다	6.3	7.4
계	100.0	100.0

2-3) 북한 경제의 개방이 점차 확대되었다

항 목	3분기(%)	2분기(%)
1. 매우 그렇지 않다	5.0	8.8
2. 그렇지 않다	37.5	29.4
3. 보통이다	41.3	35.3
4. 그렇다	16.3	26.5
5. 매우 그렇다	0	
계	100.0	100.0

2-4) 북한 내부의 경제 사정이 점차 개선되고 있다

항 목	3분기(%)	2분기(%)
1. 매우 그렇지 않다	7.5	8.8
2. 그렇지 않다	41.3	1.5
3. 보통이다	40.0	55.9
4. 그렇다	11.3	27.9
5. 매우 그렇다	0	5.9
계	100.0	100.0

2-5) (종합) 전반적으로 남북 간 경제적인 관계가 좋아졌다

항 목	3분기(%)	2분기(%)
1. 매우 그렇지 않다	3.8	27.9
2. 그렇지 않다	52.5	58.8
3. 보통이다	38.8	11.8
4. 그렇다	5.0	1.5
5. 매우 그렇다	0	0
계	100.0	100.0

2-6) (전망) 남북 간 경제적인 관계는 현재보다 좋아질 것 같다

항 목	3분기(%)	2분기(%)
1. 매우 그렇지 않다	5.0	7.4
2. 그렇지 않다	26.3	1.4
3. 보통이다	35.0	51.5
4. 그렇다	33.8	29.4
5. 매우 그렇다	0	10.3
계	100.0	100.0

3. 사회·문화·인도적인 관계

3-1) 남북 간 사회문화 교류(문화, 체육 및 이산가족 상봉 등)가 활발해졌다

항 목	3분기(%)	2분기(%)
1. 매우 그렇지 않다	10.1	38.3
2. 그렇지 않다	40.5	45.6
3. 보통이다	32.9	13.2
4. 그렇다	13.9	2.9
5. 매우 그렇다	2.5	0
계	100.0	100.0

3-2) 북한에 대한 우리 국민의 신뢰가 높아졌다

항 목	3분기(%)	2분기(%)
1. 매우 그렇지 않다	17.7	22.1
2. 그렇지 않다	44.3	63.2
3. 보통이다	34.2	11.8
4. 그렇다	3.8	2.9
5. 매우 그렇다	0	0
계	100.0	100.0

3-3) 정부의 대북 인도적 지원이 증대되었다

항 목	3분기(%)	2분기(%)
1. 매우 그렇지 않다	8.9	27.9
2. 그렇지 않다	34.2	50.0
3. 보통이다	48.1	20.6
4. 그렇다	8.9	1.5
5. 매우 그렇다	0	0
계	100.0	100.0

3-4) (종합) 전반적으로 남북 간 사회·문화·인도적인 관계가 좋아졌다

항 목	3분기(%)	2분기(%)
1. 매우 그렇지 않다	10.1	30.9
2. 그렇지 않다	32.9	52.9
3. 보통이다	46.8	16.2
4. 그렇다	10.1	0
5. 매우 그렇다	0	0
계	100.0	100.0

3-5) (전망) 남북 간 사회·문화·인도적 관계는 현재보다 좋아질 것 같다

항 목	3분기(%)	2분기(%)
1. 매우 그렇지 않다	3.8	11.8
2. 그렇지 않다	19.0	51.4
3. 보통이다	38.0	25.0
4. 그렇다	39.2	11.8
5. 매우 그렇다	0	0
계	100.0	100.0